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별하다! 고양특례시

정리 평화미래정책관



#01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하 "특례시"라 한다)

대통령 특례시 필요성 인정(2017. 4. 11/ 제19대 대선 유세)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자율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2018. 10. 30)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투명성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2018. 12. 31)

지방소비세율 11%→15%로 확대(2020년 21%까지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차관·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2019. 3. 26)

국회 안건 심의 예정

#02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기초 지자체 수준의 행정·재정권한
됨에 맞지 않는 곳을 입고 있는 100만 대도시!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



광역시 승격 NO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대도시 특례인정

정부 정책기조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한 대폭 확대 강화 등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 추진(광역시는 차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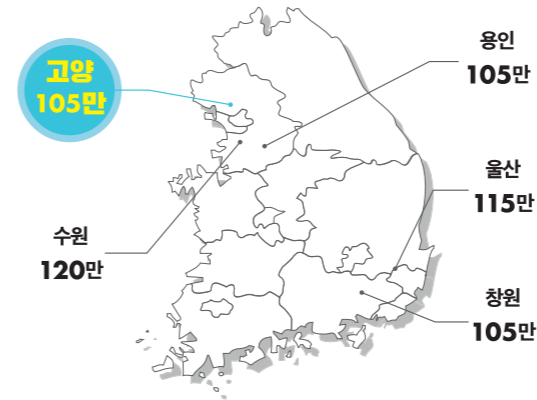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2018. 10. 30)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투명성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03 고양시, 특례시 지정 왜 필요한가요?

도시규모

100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다수 출현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함에도
획일적 자치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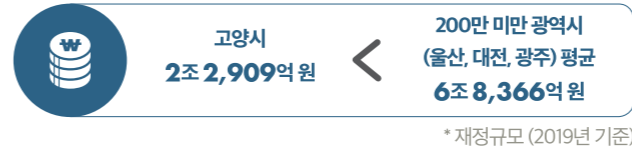
*재정 규모는 100만 대도시의 2배 이상 큼

* 2019년 7월 기준

고양시 지축·향동지구 등
택지개발 완료 시 울산광역시보다
큰 인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역전 예상

예산규모

도시규모는 커졌으나 획일적 조세구조 적용으로 예산규모 확보와 재정 운영 여건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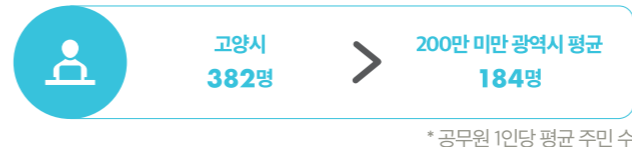
*재정규모 (2019년 기준)

행정사무

제한적 사무 부여로 도시규모에 걸맞은 광역행정 처리 미흡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무특례 확대 필요

조직운영

행정수요 급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조직과 체계로 주민불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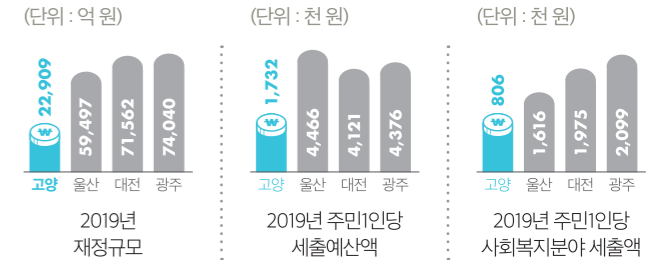


*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

▶ 인구 105만 대도시인 고양시 시민의 맞춤형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평등,
차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절실

#04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규모 차이로 인한 낮은 복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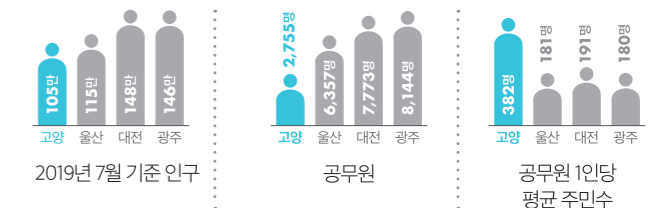


100만 대도시의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보장사업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어촌도시 (군 포함)	비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기본재산 공제금액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1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금액	38만 원	29만 원	18만 원	

※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수혜자 차별 : 고양시는 105만
대도시임에도 중소도시 기준 적용

인구 105만 광역행정수요 대응 한계



도시(광역단체) 협의·승인 필요 사무 다수



고양시의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잠깐!! '특례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오르나요?
A. NO!! 특례시가 된다고 세금이 오르지 않아요!